

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‘생산 보조금’의 내년 도입이 무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6.23.(화). 조선비즈 「배터리 업계 요구해 온 ‘생산 보조금’ 내년 도입 무산 돼」 기사에서,
 - 조선비즈는 “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배터리 업계 ‘생산 보조금’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산업부 입장 >

- 2027년 예산 요구 관련 ‘생산 보조금’은 배터리 협회·기업에서 산업부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.
- 다만, 배터리의 ‘국내생산촉진세제’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재경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,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강규형 (044-203-4260)
		담당자	사무관	박문일 (044-203-4263)